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경제 영역의 주요 동향

오성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방 후 ~ 1960년대

전후 복구 경제기반 모색

1970년대 ~ 1980년대

고도성장 산업화·수출

1990년대 ~ 2008년

글로벌화 위기 극복

2009년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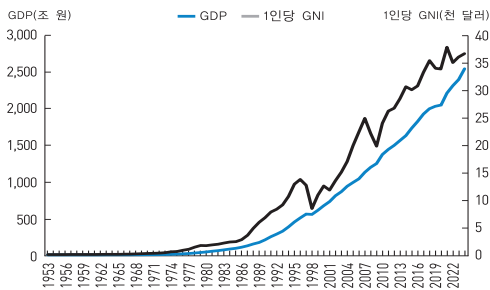
선진국 진입 저성장기

[시대별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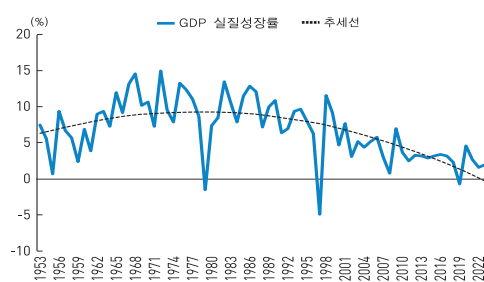
- (해방 후~1960년대) 광복과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경제는 미국의 원조와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하며 생존과 경제기반 구축에 주력하였다. 산업은 농업 중심에 머물렀고, 외화 획득은 주로 무상원조와 농수산물 수출에 의존하였다.
- (1970년대~1980년대) 1970~1980년대 한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지향 전략에 힘입어 연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수출 품목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기계·전자제품으로 고도화되며 산업구조가 급격히 전환되었다.
- (1990년대~2008년) 1990년대 한국은 외환위기(1997)를 거치며 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노출했으나, 구조조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 IT·자동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수출과 산업이 재편되었다.
- (2009년~현재) 2009년 이후 한국은 선진경제권에 진입하였으나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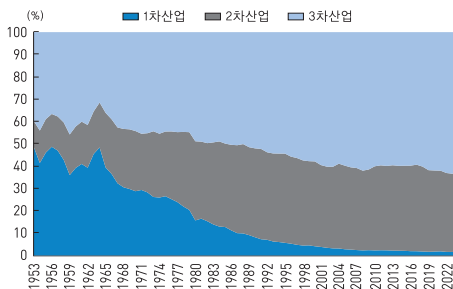
국내총생산(GDP) 및 1인당 국민총소득(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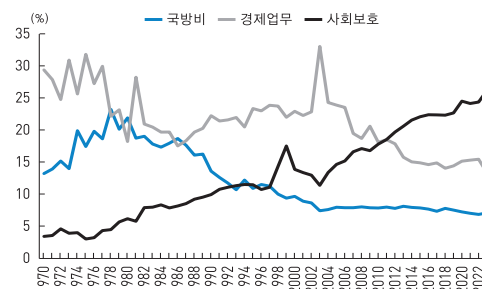
GDP 실질성장률



산업별 GDP 비중



주요 부문의 일반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주: 출처, 정의 등은 본문을 참고하기 바람.



1945년 광복 이후 한국경제는 전쟁과 폐허 속에서 출발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압축적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고, 때로는 경제 자체가 후퇴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 이후 우리 사회가 이룬 경제적 성취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1950년대 최빈국 수준에 머물던 한국경제는 60년대부터 고도성장기에 진입하여 연평균 10%를 넘나드는 경제성장을 20년 이상 지속했다. 그 결과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가입하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군에 속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듬해인 1997년,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라는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훌륭히 극복하였다. 비록, 성장의 폭이 둔화되기 시작했지만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였고, 현재 한국은 경제 규모와 국민의 생활 수준 양 측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였다.

산업 측면에서도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었다. 1960년대 초 약 4,1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연간 수출액은 2024년에 6,826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6위권 수출국이 되었다. 정부의 중심은 국가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방과 산업 부문에서 복지 분야로 변화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1960년대 15% 미만에서 2023년에는 19.0%까지 상승했다.

본 글은 1953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 주요 거

시경제 지표¹⁾들의 시계열 변화와 구조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성장 배경과 경제구조 변화, 특징적 사건들을 소개하며 한국경제의 지난 80여 년간의 여정을 회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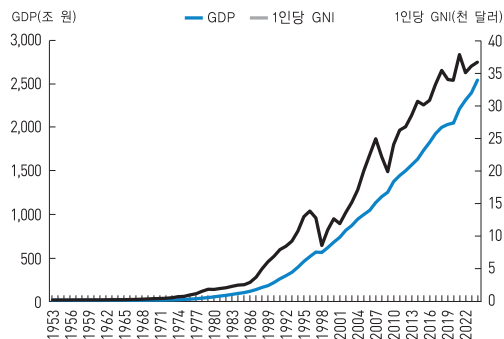
경제성장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에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으로,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그림 XII-1]은 195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명목 GDP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에서 한국의 명목 GDP는 1953년 약 477억 원에서 2024년 2,557조 원(잠정)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1960년대부터 추진한 경제개발계획, 수출지향 산업화,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통해 GDP 곡선은 급속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비록 상승세가 주춤하긴 하지만, GDP는 2000년대 이후 IT산업 발전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은 한 국가의 국민이 생산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국

1) 주요 거시경제 지표는 일반적으로 소비, 노동, 산업, 정부지출, 무역, 외환 등의 분야를 일컫는다. 그러나 소비, 노동은 별도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어 본 글에서는 소개하지 않는다.

[그림 XII-1] 국내총생산(GDP) 및 1인당 국민총소득(GNI), 1953~2024



주: 1) 2024년 국민계정 자료는 잠정치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민의 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지표다. [그림 XII-1]을 살펴보면 명목 1인당 GNI는 1953년 67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24년에 3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며 생활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1인당 GNI 곡선을 보면 GDP 성장과 달리 특정 시기의 경제 위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일시적 정체 또는 하락 구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1인당 GNI는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며 경제 회복력과 소득 증가의 지속성을 보여주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NI는 36,745달러(잠정)로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들로 한정할 경우 6위에 달한다(한국은행, 2024).

[그림 XII-2]는 같은 기간의 GDP 실질성장률과 그 추세를 나타내며, 한국경제의 성장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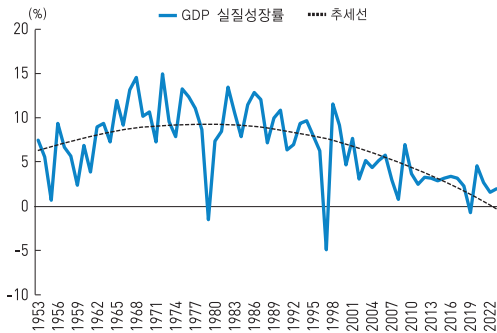
도, 경기변동 및 경제위기 상황을 보여준다. 경제 규모를 측정할 때는 시장가격을 고려한 명목지표로 충분하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볼 때는 물가 상승(또는 하락)의 영향을 제거한 재화와 서비스 산출의 성장만을 고려하는 실질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그래프에서 1960~80년대는 고도성장의 시기로, 성장률이 연 10%를 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변동 폭이 상당히 컸다. 당시 성장률의 급등락은 정부 주도 산업화, 수출 확대, 대외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한다. 1970년대에는 1973년과 1979년에 있었던 두 차례 오일 쇼크의 영향으로 인한 성장률 급락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1980년의 -1.5% 역성장은 이전에 겪지 못했던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이후 1980년대는 전반적으로 호황기였고, 특히 1986~1988년에 있었던 저유가·저달러·저금리의 ‘3저 호황’ 시기에는 성장률이 다시 두 자릿수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되며 급상승 곡선을 그렸다.

1990년대에는 성장률 변동성이 줄어드는 대신 추세선이 점차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4.9% 역성장은 한국경제사 전체에서 최저점으로, 당시 금융시장 기업들의 구조적 취약성의 결과인 동시에 대규모 실업, 노숙인, 비정규직 양산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1999년에는 11.6% 성장으로 V자형 반등을 이뤘다. 2000년대에는 IT산업의 성장과 대외 호조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8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0.8% 성장, 2010년 7.0% 반등이 그래프에 뚜렷이 나타난다. 이후 2010년대에는 성장률은 3% 안팎으로 둔화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0.7%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래프의 추세선은 전반적으로 1960~1980년대 고도성장에서 점차 성장을 감소세가 이어지며, 2010년대 이후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으로 이행했음을 명확히 시사한다.

[그림 XII-2] GDP 실질성장률 및 추세, 1953~2024



주: 1) 실질성장률은 명목성장률에서 물가변동 영향을 제거한 지표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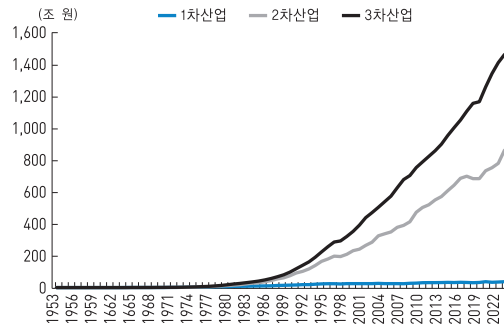
산업구조

산업구조의 비중은 한 나라 경제의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1차 산업(농림어업), 2차 산업(광업·제조업·건설업), 3차 산업(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1차 산업의 비중은 감

소하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확대된다. [그림 XII-3]과 [그림 XII-4]는 195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산업구조의 양적 성장과 구성 비중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XII-3]은 산업별로 만든 생산물의 당해 연도 시장가치(명목 부가가치)의 절대 규모를 보여준다. 초기에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부가가치 규모가 모두 작았으며, 3차 산업 역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경제개발계획과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2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급격히 상승했고,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계기로 그 기울기는 더욱 가팔라졌다. 1980년대 이후에는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3차 산업이 명목 부가가치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1,000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 1차 산업도 부가가치의 절대 규모가 상승하긴 했지만, 그 추세는 정체되거나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준다.

[그림 XII-3] 산업별 GDP, 195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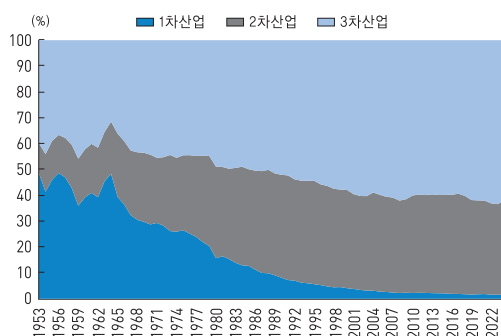
주: 1) 2024년 국민계정 자료는 잠정치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그림 XII-4]는 산업별 GDP 비중의 변화를 백분율로 나타낸 누적 그래프로,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953년에는 1차 산업이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1960~1970년대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1차 산업의 비중은 가파르게 하락했고, 1980년대 초에는 15% 미만, 2020년대에는 1.6%로 축소되며 경제 내 중요성이 대폭 감소하였다. 2차 산업 비중은 1960~1970년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1979년에 30%를 돌파한 이후 1991년에 37.0%를 차지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성장하면서 2차 산업 비중은 안정되거나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3차 산업은 1953년 38.5%에서 시작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했다. 1996년에 처음으로 GDP의 절반 이상을 넘어선 후 지속적으로 비

중을 확대하여 2020년대에는 약 58%를 차지하며 3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정부의 강력한 산업화·고도화 정책, 기술 진보, 무역 자유화, 내수시장 성장, 노동력의 부문 간 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1960~1970년대에는 포항제철 건설, 조선·기계·전자산업 육성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2차 산업의 급성장을 견인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세계화와 무역확대가 금융, 운송, 관광, 정보통신 등 서비스업의 성장 배경이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ICT와 금융서비스 중심으로 3차 산업이 재편되며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었고, 제조업은 자동차·반도체·정밀기계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구조가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서비스업에서 한류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산업과 플랫폼 경제가 부상하였다.

[그림 XII-4] 산업별 GDP 비중, 1953-2024



주: 1) 2024년 국민계정 자료는 잠정치임.

2) 산업별 GDP 비중의 총합은 100%가 되지 않음.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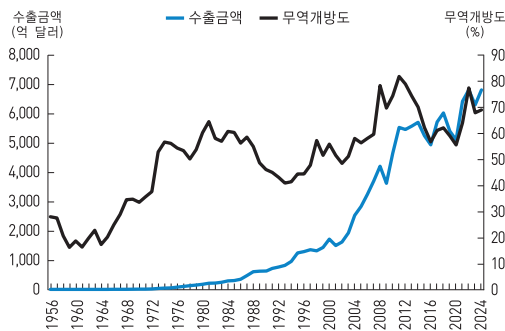
무역은 한국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성장 방향을 결정짓는 중추적 요소다. [그림 XII-5]는 1956년부터 2024년까지 수출금액과 무역개방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1950년대 후반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2천만 달러에 머물렀으며, 수출 품목도 농수산물 등 1차 상품 위주였다. 그러나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수출지향



적 공업화 전략이 본격 추진되면서 수출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대에는 섬유·신발·가발 등 경공업 제품이, 1980년대에는 철강·조선·전자 등 중화학 제품이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 잡으며 외화 획득 능력이 강화됐다. 1980년대 중반까지 완만하던 수출금액 곡선은 1980년대 말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연간 2,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연간 수출액이 6,836억 달러를 넘어서며 한국은 세계 6~7위권 수출 대국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국가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무역개방도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1964년까지 30%에 미치지 못하던 무역개방도는 1960년대 후반 약 35%에서 1981년 64.7%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이후 무역개방도는 1993년에 41.0%까지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그림 XII-5] 수출금액 및 무역개방도, 1956-2024



주: 1) 무역개방도 = $\frac{\text{총수출액} + \text{총수입액}}{\text{GDP}} \times 100$

2) 2024년 국민계정 자료는 잠정치임.

출처: 관세청 「무역통계」,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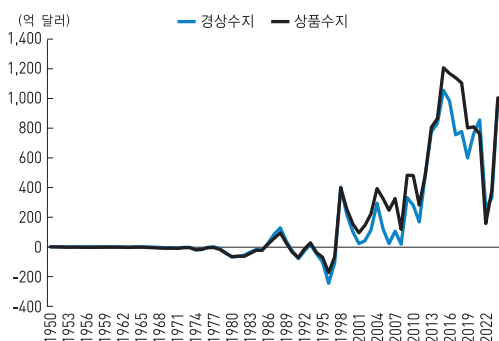
불구하고 같은 시기 수출금액은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무역 위축보다는 내수경제의 성장, 수입대체 산업화, 국제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후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과 글로벌화 가속화로 무역개방도가 다시 상승하게 된다. 2011년에 8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 69.2%로, 한국경제가 세계 경제와 깊이 연계된 개방경제임을 보여준다.

[그림 XII-6]은 경상수지와 상품수지의 장기 추이를 통해 무역과 대외거래 수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경상수지는 한 나라가 해외와 주고받는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상품수지를 비롯해 서비스수지, 소득수지(이자·배당), 이전수지를 모두 포함하며 넓은 의미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상품수지는 수출로 벌어들인 돈에서 수입에 쓴 돈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 나라의 물건을 팔아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0에 가까운 적자가 이어졌다. 이는 해당 기간에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재, 원자재, 에너지 수입량이 많았고, 저부가가치 상품 중심의 수출구조, 두 차례 석유파동, 외채 상환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모두 흑자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후 1986~1989년은 사상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연속 달성된 시기였는데 앞서 언급한 '3저 호황'과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맞물린

결과이다. 이 시기에 한국은 외채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순채권국으로의 전환점을 맞았다.

[그림 XII-6] 경상수지와 상품수지, 1950-2024



주: 1) 2024년 국제수지 자료는 잠정치임.

출처: 한국은행,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의 이해」, 2016; 「국제수지」, 각 연도.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는 단기 자본 유출과 외환보유액 급감으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이는 [그림 XII-6]에서 경상수지 급락과 함께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후 구조조정과 수출산업 재편, 내수 억제와 환율정책 전환을 통해 1998년부터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국으로 돌아섰다. 2000년대와 2010년대 대부분 기간에 경상수지와 상품수지는 안정적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대외건전성이 크게 강화됐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472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무역적자가 발생하며, 한국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가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표 XII-1]은 10년 단위로 한국의 10대 수출상

품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천을 보여준다. 1960년대에는 철광석, 중석, 석탄 같은

〈표 XII-1〉 연도별 10대 수출상품, 1961-2024

(단위: %)							
순위		1961		1970		1980	
1		철광석	13.0	섬유류	40.8	의류	16
2		중석	12.6	합판	11.0	철강판	5.4
3		생사	6.7	가발	10.8	신발	5.2
4		무연탄	5.8	철광석	5.9	선박	3.6
5		오징어	5.6	전자제품	3.5	음향기기	3.4
6		활선어	4.5	과자제품	2.3	인조 장섬유직물	3.2
7		흑연	4.2	신발	2.1	고무제품	2.9
8		합판	3.3	연초 및 동 제품	1.6	목재류	2.8
9		미곡	3.3	철강제품	1.5	영상기기	2.6
10		돈모	3.0	금속제품	1.5	반도체	2.5
합계			62.0		81.0		47.6
순위		1990		2000		2024	
1		의류	11.7	반도체	15.1	반도체	18.7
2		반도체	7.0	컴퓨터	8.5	자동차	9.3
3		신발	6.6	자동차	7.7	석유제품	6.6
4		영상기기	5.6	석유제품	5.3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3.4
5		선박	4.4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4.9	합성수지	3.1
6		컴퓨터	3.9	무선 통신기기	4.6	자동차 부품	3.0
7		음향기기	3.8	합성수지	2.9	철강판	2.7
8		철강판	3.8	철강판	2.8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2.5
9		인조 장섬유직물	3.6	의류	2.7	무선 통신기기	2.3
10		자동차	3.0	영상기기	2.1	정밀 화학원료	1.6
합계			53.4		56.6		53.3

주: 1) 1990년 이전 자료는 주요 무역동향 지표, 2000년 이후는 무역통계에서 인용함.

2) 전체 수출상품 중 10대 수출상품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국제무역연구원 「주요 무역동향지표」, 1961-1990;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60년사 총괄편」, 2010, p.9에서 재인용; 관세청, 「무역통계」, 2000,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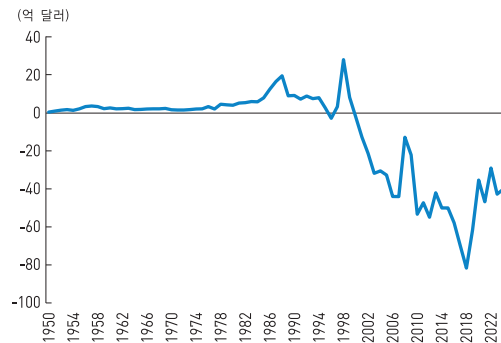
원자재가 주요 수출품이었으며, 이는 당시 한국 경제가 원자재와 저부가가치 품목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70년대에는 섬유, 합판, 가발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이 수출을 이끌며 본격적인 공업화가 추진됐다. 1980년대에는 철강관, 선박, 음향기기 등 중화학공업과 기계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며 산업구조가 고도화됐다. 2000년대에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기기 등 첨단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품목이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에는 반도체, 자동차, 정밀화학제품 등 첨단 제조업과 부품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그림 XII-7]은 이전수지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전수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 없이 나란 주고받는 무상 자금을 뜻한다. 해외 송금, 무상 원조, 기부금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직접적인 대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전수지는 경상수지 전체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경제발전의 추이를 살펴볼 때 의미 있는 지표다.

1950~60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원조가 한국의 주요 외화 획득 수단이었기에 이전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원조 의존도가 줄어들고, 한국은 점차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위상이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전수지는 점차 적자 구조로 바뀌었다. 2000년 이후에는 해외 유학생 송금, 해외 노동자 송금,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이 늘면서 이전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후 2024년까지 이전수지 적자 폭은

확대 추세에 있으며, 이는 고소득국으로서의 국제적 책무 이행과 해외투자 소득 유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림 XII-7] 이전수지, 1950~2024



주: 1) 2024년 국제수지 자료는 잠정치임.
출처: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 연도.

외환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의 통화당국이 보유한 대외 지급 준비자산으로, 국제수지 적자나 외환 위기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가의 대외 지급 능력을 뒷받침하는 유동성 자금이다. 주로 달러화 표시 자산(미국 국채, 예치금 등), 유로·엔화 등 기타 통화자산, 금, IMF 특별인출권(SDR) 등이 이에 포함된다. 외환보유액은 국가의 대외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수입액이나 단기외채 규모 대비 적정 수준을 평가한다.

[그림 XII-8]은 196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외환보유액 절대 규모와 GDP 대비 비중의 변

화를 보여준다. 1960~1970년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수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당시 낮은 수출 기반과 높은 원조 의존도를 반영한다. 예컨대 1975년 외환보유액은 약 15억 5천만 달러로 GDP의 7%에 불과했다. 이후 산업화와 수출 증가로 보유액은 점진적으로 늘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GDP 대비 5% 수준에 머물며, 여전히 취약한 외환 사정을 드러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외환보유액은 약 332억 달러(GDP 대비 5.3%)였고, 위기 직후인 1997년에는 204억 달러(GDP 대비 3.5%)로 급감했다. 이러한 외환보유액의 급락은 당시 국가부도 위기의 핵심이었다.

이후 IMF 구제금융과 함께 외환보유액 확충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며, 보유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1년에는 1,028억 달러를 돌파했고, 2005년 2,103억 달러, 2011년 3,064억 달러, 2018년 4,036억 달러에 도달했다.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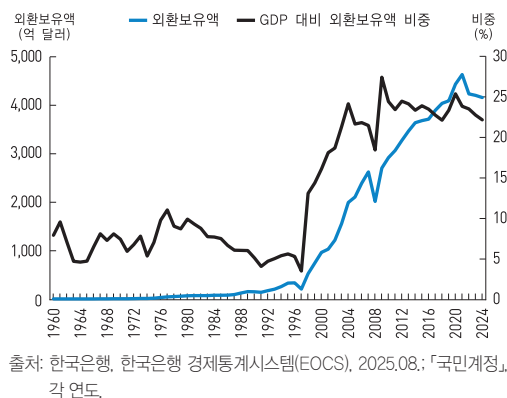
비중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대 20%대에 진입하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27.5%로 정점을 찍었다. 2024년 예상치는 4,156억 달러(GDP 대비 22.2%)로, 여전히 견조한 대외 지급 능력을 시사한다.

[그림 XII-9]는 1960년부터 2024년까지 원·달러 환율의 변화를 나타내며, 한국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구조적 전환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1달러=50원의 고정환율제를 시행했다. 초기에는 각종 법령을 통해 외환과 무역을 엄격히 통제하며 관리했으며, 1964년에는 복수환율제를 폐지하고 단일 변동환율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정부가 환율을 사실상 통제하는 관리형 체제가 유지되었다. 이후 1980년 고정환율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1990년에는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해 시장 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1960~1970년대 고정환율제 아래 환율은 100~400원 수준에서 안정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점진적인 가치하락이 이어져 환율이 상승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여 1998년 연평균 1,400원대까지 치솟았다. 특히, 1998년 1월 21일 환율은 1971.9원으로, 지금까지도 최고치로 남아 있다. 이후 외환시장 안정과 외환보유액 축적에 힘입어 환율은 2000년대 들어 1,000~1,200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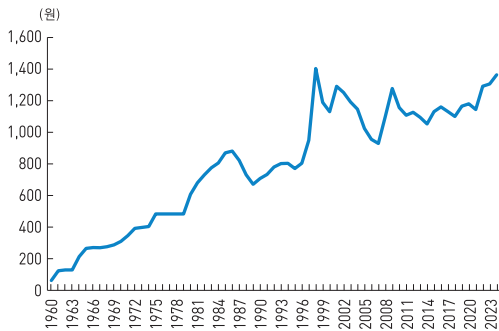
[그림 XII-8] 외환보유액 및 GDP 대비 비중, 1960~2024





로벌 긴축기 등 대외 충격 시기에 환율은 다시 급등하며 원화 약세를 보였다([그림 XII-9] 참조).

[그림 XII-9] 연평균 원·달러 환율, 1960-2024



출처: IMF, Data.imf.org;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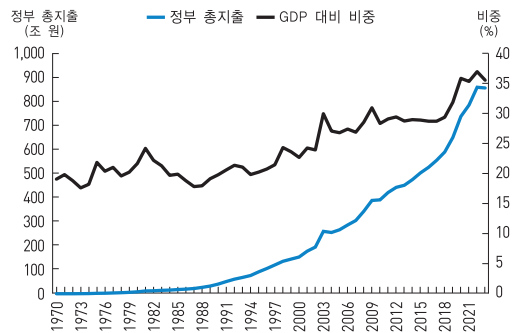
정부지출

정부부문 재정지표는 한 나라의 정책 기초, 경기 대응 능력, 복지국가 발전 단계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그림 XII-10]은 197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정부 총지출과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의 장기적 변화를 보여준다. 1970년 한국의 정부 총지출은 5,393억 원으로, GDP 대비 약 19% 수준이었다. 이 시기 정부 재정은 산업화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농업개혁 등 경제개발 기반 조성에 집중되었다. 1980년대에도 GDP 대비 20% 안팎의 수준을 유지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21~24% 수준으로 점진적 상승세를 보였다.

2000년대 들어 복지지출 확대와 경기 대응적 재정정책의 강화로 총지출 비중은 25% 이상으로 높아졌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GDP 대비 정부 총지출은 35%대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후 유지되며 사상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한국 재정의 구조적 변화, 즉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복지·고용안정 중심의 재정지출 확대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그림 XII-10] 정부 총지출과 GDP 대비 비중, 197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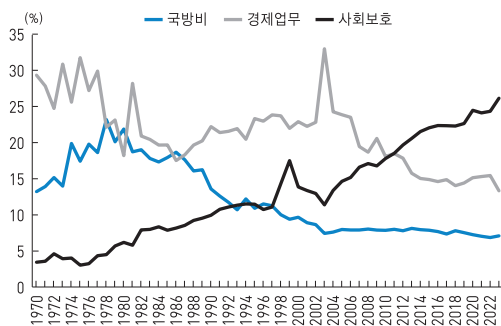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그림 XII-11]은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내 기별 지출 구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1970~80년대에는 국방과 경제업무 지출이 정부 재정의 양대 축이었다. 국방비는 1978년 총지출의 23.2%를 차지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시기 냉전 구도와 한반도 안보 환경이 재정 운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후 국방비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여 1990년대에는 10% 중반, 2000년대 이후에는 7~9% 수준, 최근에는 6%대 후반~7% 초반까지 낮아졌다. 이와 같은 국방비 비중의 축

소는 해당 시기 절대액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 지출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상대적 비중 축소의 결과다. 경제업무 지출은 산업화 초기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농업 기반 정비, 중화학공업 육성, 교통·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경제성장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총지출의 약 20~30%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이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13~15%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사회보호 지출은 1970년까지만 해도 3~5% 수준의 미미한 비중을 보였으나, 국민연금·건강보험·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 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는 7~10%, 1990년 이후와 2000년대 초반에는 11~14%였고, 2010년대에는 17~22%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2023년에는 총지출의 26% 이상을 차지하며 정부 재정의 중심 항목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재정이 경제개발 지향적 구조에서 복지·사회보장 지향적 구조로

[그림 XII-11] 주요 부문의 일반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197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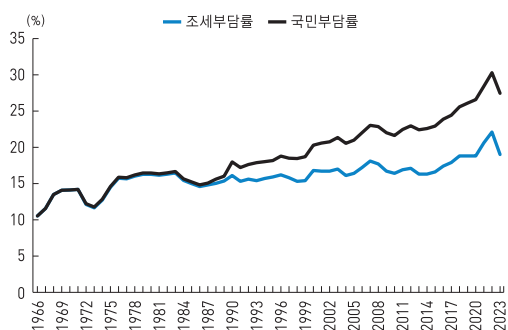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전환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림 XII-12]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변화를 통해 정부 재정의 수입 기반과 국민 부담 구조를 보여준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의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정부가 조세를 통해 경제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조달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에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험료)을 더한 비율로, 국민이 정부와 공공부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전체 금전적 의무의 크기를 나타낸다. 조세부담률은 좁은 의미의 세금 부담을, 국민부담률은 조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공공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림 XII-12]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1966-2023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 1966-2001 각 연도;
국세청·관세청, 「징수보고서」, 2002- 각 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 2002- 각 연도;
OECD, Revenue Statistics, 1975, 1990- 각 연도.

1960~1970년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5% 미만의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소득세·법인세 강화 등 세제 개편과 산업화에 따른 세수 기반 확대로 조세부담률은 미약한 상승을 시작하였다. 1980~1990년대에는 소득·법인세 기반 확대, 경제성장의 효과로 15~16%대까지 올랐고, 2000년대 들어서는 17~18% 내외에서 등락했다. 2021년에는 경기 회복과 부동산·자산시장 호황의 영향으로 20.6%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20%를 돌파했으며, 2022년에는 22.1%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경기 둔화, 세수 부족, 세제 감면의 영향으로 19.0%로 하락했다.

국민부담률은 1960년대에는 조세부담률과 동일했는데, 이는 당시 사회보험제도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7년에 건강보험이 5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면서 비로소 조세부담률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후 1986년 국민연금 도입, 1995년 고용보험 도입,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및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사회안전망의 확장에 힘입어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국민부담률은 2000년에 20.3%로 처음으로 20%를 돌파하였고, 2018년에 25.6%를 달성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22년에 최고치인 30.3%에 이르렀다가 2023년에는 약 27.4%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도의 감소세는 조세부담률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은 여전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비중은 과거에 비

해 크게 증가했으며,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적 구조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맺는말

지난 80여 년간 한국경제는 국내총생산, 산업구조, 수출입, 외환보유액, 재정, 조세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측면에서 놀라운 변화와 성과를 보여주었다. 1950년대에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던 한국은 압축적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GDP 규모 세계 10위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경제로 발돋움했다.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 위주의 구조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고도 산업구조로 전환하였으며,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무역 규모가 세계 6위에 이르는 무역 대국이 되었다. 외환보유액 확충으로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대외 지급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재정운용은 경제성장에 맞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조세부담률은 경제 규모에 걸맞게 상승하여 복지국가로 가는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들의 변화는 한국경제가 개도국에서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도약해 온 과정을 생생히 입증한다. 예를 들어, 네 번의 거대한 세계 경제위기(1979, 1997, 2009, 2020년)에도 매번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 외환위기의 아픔을 딛고 20년 만에 외환보유고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는 점, 수출 품목을 경

공업 제품에서 첨단제품으로 변화시켜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 등은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 그림자도 존재한다. 1960~1970년대 압축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한 노동환경, 정부 주도 경제계획의

부작용인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확대 및 지역 간 불균형 발전,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생겨난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그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및 저출생 문제 역시 우리 사회가 대응해야 할 커다란 숙제이다.

참고문헌

한국은행. 2025. 「2024년 1인당 4/4분기 연간 및 국민소득(잠정)」.
한국개발연구원. 2011. 「한국경제 60년사」.